

‘5·18 홀대·모독’ 이어 태극기집회 보훈단체 참여 독려 의혹

박승춘 보훈처장 조속 퇴진 목소리 거세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제기…‘퇴출 0순위’ 즉각 사퇴 촉구

오월단체 “올해는 5·18 반쪽기념식 안되도록 결단해야”

박승춘(사진) 국가보훈처장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박승춘 체제로는 제37주년 5·18기념식을 치를 수 없다’고 입장 정리를 한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도 ‘탄핵반대 집회 참여 독려’ 의혹을 전하면서 박 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6일 “박승춘 보훈처장이 최근 보훈단체 대표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5년째 배척하고 제장 거부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박 처장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퇴출당해야 할 ‘0’ 순위 공직자”라고 조속한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실은 박 처장의 보훈단체 탄핵반대 집회참여 독려의혹과 관련해 “최의원이 일부 보훈단체장에게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으나 해당 단체장이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더는 구체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의 한 보훈단체장은 “박 처장은 어차피 정권교체가 되면 물러나야 할 사람으로,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관제대모 동원 의혹을 문제 삼아 봐야 의미가 있겠느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가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5·18민중항쟁을 홀대하고 5·18피해자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수년째 이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5·18단체는 박 처장의 우편향 행보를 감쌌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데다 보훈처가 매년 4월 5·18 정부기념식의 틀을 짜는 점 등을 고려해 새 대통령 취임(5월9일)까 전 그의 사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5·18 홀대, 반쪽짜리 5·18기념식’을 끝내야한다는 것이다.

박 처장 재임(2011년 2월~)기간 보훈처는 노골적으로 5·18을 홀대, 모독해 지탄받아왔다.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5년째 무시

하고, 지난 2015년에는 5·18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분을 샀다.

지난해 6월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11공수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 처장 체제의 보훈처가 5·18을 모독하는 행태를 잇따라 보이면서 경건하게 치러져야 할 5·18기념식은 ‘정부 따로, 시민 따로’의 반쪽짜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회가 3차례나 박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 의원이 지적인 보수단체 탄핵반대집회 동원 의혹은 올해 초 보훈처장과 보훈단체장 신년 간담회 성격의 식사자리에서 한 단체장이 ‘보훈단체가 앞장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야하는 것이냐’거 한 발언이 외전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서 열리는 ‘제주 4·3사건 사진전’

5·18재단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제주 4·3사건 70주년 기념 사진전 오픈 기념식이 오는 17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5·18기념재단과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진전 ‘제주 4·3, 어둠에서 빛으로’는 4·3사건의 실상, 진실규명운동, 기념사업을 기록한 사진 63점과 영상 2편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진다. 기념식은 두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제주 4·3유족회 대표와 5·18단체장 축사, 전시 설명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

지 8년 동안 국가 공권력과 민간 무장대에 의해 제주 인구의 약 10%가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40여 년간 은폐된 진상이 민주화 이후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5·18민중항쟁처럼 역사 부정 세력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5·18재단은 전했다.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인권 유린과 학살을 감행했던 공권력을 상기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시회를 준비했다”면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 인권, 평화라는 5·18 정신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0522.

/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배고파 김치 훔친 70대…가게주인이 선처 호소

절도 피해를 당한 반찬가게 주인이 김치를 훔친 70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자연이 너무 딱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반찬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는 김치 5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의 최씨는 미혼으로 가족이 없으며, 국가에서 나오는 20만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받아 이 중 15만원은 모델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생활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배가 너무 고파지만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이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하루에 라면 등 한끼만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주 중에 비닐봉지가 터져 김치가 땅에 쏟아졌는데도, 흠이 묻은 김치를 주워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상인 이모(여·65)씨는 최씨의 자연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불법 적치물 수거

1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이면도로에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에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들을 수거하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방역 속수무책 전남 AI 급속 재확산

장흥·무안에서 하루 4곳 동시 발생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전남 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도내에서 하루에 AI가 4곳에서 발생한 것도 지금까지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오후 전남 동물 위생시험소로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다슬을 포함한 주요 오리 계열사 등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15일 장흥군 부산면 3곳, 무안군 일로읍 1곳 등 오리 전문 가공기업인 다슬의 계열화 농장 4곳에서 일제히 AI가 발생하면서 ‘철새 감염’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쏠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들은 모두 보성의 출하장에서 알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된 알로 인해 AI가 발생한 것인지, 해당 농장에서 감염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회의를 통해 방역

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좀 더 파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장흥군 부산면 인접한 3개 다슬 계열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안에 있는 5개 농장 오리 5만3000마리, 무안군 일로읍 다슬 계열 농장 반경 500m 이내 5개 농가 가금류 11만1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15일 자정부터 17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오리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바짝 긴장한 상태다.

전남도 역시 AI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도내 다슬 계열 농장 66곳에 대해 22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1월 16일 해남을 시작으로 모두 29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15일 발생한 4건도 고병원성 판정이 나오면 33건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42.4%인 14건이 다슬 계열 농장에서 발생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검찰, 병원·세무법인 등 25곳 압수수색

의약계 리베이트 수사 확대

광주·전남지역 의약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원과 세무·회계법인 사무실 등 2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모 병원의 세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A(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해당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B(여·43)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투신 사망한 광주 모 병원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의 세무 편의를 봐주겠다고 세금 감면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다. B씨는 세무 신고 증빙

자료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광주 모 병원과 세무법인·회계법인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총 2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세무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의 세무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경찰은 약품 구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C(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의명의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내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2월29일 C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의사와 세무공무원 등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이후 수첩에 적힌 광주·전남지역 병원 8곳을 수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네줄 비비 끈 채 탄다며 어린이 손찌검한 경비원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놓고 있는 열 살짜리 남아아이를 향해 “왜 그네를 똑바로 타지 않고 비비 끈 채로 타느냐”며 혼

을 한 뒤 손찌검을 했다가 경찰서행.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유모(64)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순찰 도중 그네에 앉아 줄을 끈 채로 타고 있던 김모(10)군에게 “그렇게

타면 그네 줄이 금방 망가진다”고 주의

를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뺨을 수차례 때린 데 이어 엉덩이에도 2차례나 발길질을 했다는 것. ○~경비원 유씨는 김군 어머니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김군에게 경비원 유씨가 주의를 줬는데도 즉각 멈추지 않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설명. /전은재기자 ej6621@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전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